

육군·해병 21→18개월, 해군 23→20개월 등

10월 전역 병사부터 복무기간 최대 3개월 줄어든다

이낙연 총리 국무회의 주재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안’ 의결
2020년 6월15일 육군 입대자
복무기간 90일 줄어든 18개월
5·18 운동, 군 사망사고 특별법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등 의결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사

오는 10월 전역예정 병사부터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을 줄여 육군·해군·해병대는 3개월, 공군은 2개월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4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을 심의·의결했다.

복무기간 단축안은 10월 전역자부터 2주 단위로 하루씩 단축해 ▲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 ▲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 ▲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 ▲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까지 줄인다.

육군을 기준으로 보면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단축안이 적용된다. 이들은 원래 올해 10월 2일에 전역해야 하지만 하루가 줄어 10월 1일에 전역하게 된다.

2020년 6월 15일 육군 입대자는 지금보다 90일이 줄어든 18개월만 복무하고 2021년 12월 14일에 제대하게 된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입영일에 따른 단축일수·전역일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도 각각 의결했다.

5·18민주화운동법 시행령은 이달 출범할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직, 인력구성, 역할, 조사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다.

위원회 사무처에는 조사지원과와 조사1과·2과·3과를 두고, 행정안전부·국방부·

여성가족부 등은 5·18 진상규명 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외교부는 위원회가 요청하면 다른 국가나 해외에 산재한 기록물 수집을 지원해야 한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시행령 역시 1948년 11월 이후 발생한 군 사망사고를 조사하기 위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직, 인력구성, 업무 내용 등을 규정한다.

위원회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진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가할 위원의 범위와 추천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흡수병합사업자가 허위·과장방송으로 제재를 받고도 결정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거나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산후조리원이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감염예방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상호 등을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가정방문·단기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인권교육 대상기관으로 지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정부는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과 2018년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생활 SOC 첫 발... 사람·지역에 대한 투자”

(사회간접자본)

文 대통령, SOC 방문행사 참석

“삶의 질·지역발전 효과 거둘 것”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공공투자를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로 전환해 나가겠다”며 “이는 사람에 대한 투자이며 지역에 대한 투자”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을 찾아 ‘대한민국 국민생활 SOC 현장방문 시리즈-동네 건축현장을 가다’라는 제목의 행사를 소화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에서 “과거에는 대규모 SOC 위주의 정책을 펴고, 도로·철도·공항·항만 투자를 기반으로 산업을 일으켜 경제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일상에 필요한 생활시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 규모가 줄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삶의 질이 중요한 가치가 되면서 경로당·어린이집·보건소·체육관 등의 시설이 필수가 됐다”며 “정부는 생활에 밀접한 이런 시설을 과거 대규모 토목 SOC와 차별화해 생활 SOC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생활 SOC 투자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을 발전시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대한민국 국민생활 SOC 현장방문, 동네건축 현장을 가다’ 행사를 위해 서울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을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 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지향하고,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는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고, 함께 공존하는 포용사회·포용국가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정부가 생활 SOC의 첫걸음을 뗐다. 투자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중장기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국민들이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피부로 느낄 때까지 정성을 들이겠다”며 “지역 주민들의 결정과 상상력은 정책과 예산에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관련예산을 5조 8000억원에서 8조 7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고, 지방자치단체의 ‘매칭 투자’까지 합치면 12조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아울러 “160개의 주민체육센터를 설치해(주민들이) 10분 이내에 체육시설에도 착해 운동하겠다는 결심을 수월하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작은 도서관도 모든 시군구에 한 개씩 243개가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또 “어린이 전용 박물관과 가상현실 체험 공간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어린이 돌봄센터도 200개소를 추가하고 지역 공공의료기관 41곳은 기능을 보강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文 대통령, 대북특사단 방북 관련 논의

외교·안보 관계장관 회의 소집
정의용·서훈·김상곤 등 참석

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특사 파견을 결단한 만큼 이번 특사 방북이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해 이튿날로 예정된 대북 특별사절단의 방북 관련 논의를 했다. 이날 밤 9시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한반도 문제를 놓고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에는 특사단에 포함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상곤 국경위 2차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비롯해 강경화 외교·조명균 통일·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국가안보실 이상철 1차장과 남판표 2차장, 권희석 안보전략비서관,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도 자리를 함께 했다.

대북 특사단은 5일 오전 서울공항을 출발해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방북, 임무를 마친 뒤 이날 오후 돌아올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오전 8시 이전에 서울에서 떠날 계획”이라면서 “서울에 도착하는 구체적인 시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좀처럼 속도를

특사단 방북의 첫 번째 목적은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문 대통령의 9월 평양 방문 및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의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다. 남북은 지난달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9월 내에 평양에서 열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그 뒤로 의제, 경호, 보도 등을 논의할 실무회담도 열리지 않는 등 정상회담 준비에 구체적 진전이 없다.

확정되지 않았지만 특사단이 김 위원장을 면담할 확률이 높다는 점에 비춰볼 때 문 대통령을 대신해 방북하는 특사와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정상회담 일정 등 구체적 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날 “대북특사단이 가서(남북)정상회담 일정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 북미관계, 비핵화 문제, 한반도 평화문제 등 모든 것에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특사단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면담 가능성에 대해선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다”면서도 “(지난 3월 특사단)1차 방북 때 김 위원장 면담 선례가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새로운 시대 향한 대전환 필요”

이해찬 더민주 대표, 교섭단체 연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4일 새로운 시대를 향한 대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포용적 성장, 적폐청산, 한반도 평화경제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년은 3·1운동 100주년에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된다”며 “새로운 시대를

향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갈수록 굳어지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해결해나갈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하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를 위해선 변화에 따른 고통을 인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미국의 저명한 학자 아담 스미스가 어떤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전환의 계곡’이라고 설명했다”며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 되기 위해서는 한동안 견뎌내야 할 고통스러운 전환기를 지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경제 번영을 위한 성장동력 마련, 울의 눈물을 닦아주는 노력과 사회통합,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 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한반도 평화경제시대 열기 등을 앞으로 20년간 해결해야 할 5대 과제로 제시했다. /김승호 기자

보르스키는 어떤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전환의 계곡’이라고 설명했다”며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 되기 위해서는 한동안 견뎌내야 할 고통스러운 전환기를 지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경제 번영을 위한 성장동력 마련, 울의 눈물을 닦아주는 노력과 사회통합,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 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한반도 평화경제시대 열기 등을 앞으로 20년간 해결해야 할 5대 과제로 제시했다. /김승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특사 파견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청와대 여인관에서 열린 외교·안보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대북특사로 파견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경위장 등 5인의 특사단과 외교·국방·통일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